

월요광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무용지물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KTX 개통으로 광주·전남의 투자 유치 및 관광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와 한전의 500개 기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구상과 더불어 우리의 염원인 제조업 중심의 생산 도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등의 정책들은 모처럼 맞은 좋은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지역균형발전협체를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000만 인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벌써 76.5%를 달성했다고 한다. 지방에서 이처럼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수도권 규제가 과밀을 막는 데 도움이 됐지만, 수도권 투자 길이 막히자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방향을 틀거나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한때 수도권 성장을 묶었던 영국·프랑스·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자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사례를 들기도 한다. 여기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 원을 투자해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량적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국토정책에서 '균형'이 빠진 채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체제로 180도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 유지되어 왔던 '선(先) 지방 지원,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기본 틀을 깨고 5+2의 광역경제권을 도입하여 수도권 이 지방과 장애물 없이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 중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선거에서 지역은 마이너이고 수도권의 표심에 승부가

달라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아예 드러내 놓고 '수도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분할하였다.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수도권과 지방이 많은 공모 사업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는 수도권 유턴 기업 재정지원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한 조치도 사실상 수도권에 주요 대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안양·수원 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개발 사업들이 재추진의 사동을 걸고 있다.

모든 것을 뺏아들이는 블랙홀인 수도권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빛가람 혁신도시와 함께 찾아온 광주·전남의 상상 발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에너지밸리와 같이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연구 개발 및 기업의 이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이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바로 인접한 충청권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충청도는 수도권에서 많은 공장의 이전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렸으며,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수충권'(首忠圈)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1000만 인 반대 서명 운동'의 결과를 보면 가장 절실한 충북보다 전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쌓인 지역 차별의 한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구도는 1차적으로 충청권의 반발 강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은 정권을 창출한 대구·경북의 자기 몫에 대한 요구이다. 부산·경남과 호남권은 그 지역만큼 기업 유치에 총력이 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선봉에 서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모양은 전략적 대응이 아닌 것 같다. 충청과 대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명분과 실리를 담아서 지원해 주자. 또 우리 몫을 주장할 때는 항상 영남권과 비교해서 인구수와 낙후도에 따라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법조칼럼

##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당성



양성필  
광주지검 검사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다. 검사는 위 세 가지 중에서 명예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의 결정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고, 이는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실제적 진실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해 왔다. 채근담(菜根譚)의 구절인 '의정식냉안(宜淨式冷眼·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고), 신물경동강장(慎勿輕動剛腸·삼가 굳센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을 마음에 새기면서 냉철한 지혜의 눈으로, 굳센 의지로 사건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검사생활을 하면서 사건처리에 서 오로지 실제적 진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무런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을 감복시킬 수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당(唐)나라 사람인 위징(魏徵)이 군주의 자세에 대해 말한 '경정즉명(兼聽則明·두루 들으면 현명해지고), 편신즉암(偏信則暗·치우쳐 들으면 도리에 어두워진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하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건관계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많이 듣고 사건처리에 반영하고자 한다. 중용(中庸)의 구절인 '곡능유성(曲能有誠·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성실함이 있을 것이다) 성즉형(誠則形·성실하면 이는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형즉저 저즉명(形則著 著則明·드러나면 분명해진다), 명즉동(明則動·분명해지면 감동이 있다) 동즉변(動則變·감동이 있으면 변화한다), 변즉화(變則化·변화하면 동화된다), 유천하지성 위능화(惟天下至誠 爲能化·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다)'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건관계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많이 듣고 사건처리에 반영하고자 한다.

중용(中庸)의 구절인 '곡능유성(曲能有誠·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성실함이 있을 것이다) 성즉형(誠則形·성실하면 이는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형즉저 저즉명(形則著 著則明·드러나면 분명해진다), 명즉동(明則動·분명해지면 감동이 있다) 동즉변(動則變·감동이 있으면 변화한다), 변즉화(變則化·변화하면 동화된다), 유천하지성 위능화(惟天下至誠 爲能化·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다)'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기고

## 영롱한 아이의 눈망울에서 보는 희망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일 직원 정례조화 때 세 살배기 어린이로부터 야생화 꽃다발을 받았다. 그 어린이는 50여 가구가 거주하는 고흥 영흥도에서 무려 30년 만에 태어난 아이였다. 영흥도 주민들은 '가고 싶은 섬 가구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라는 전남의 2대 브랜드 시책사업을 추진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담아 영흥도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꽃다발을 엮어 전달한 것이다. 필자는 30년 만에 작은 섬에서 태어난 아이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희미하게나마 저출산 극복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전남도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제4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출

산전화 정책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구의 날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구체 수준(2.1명)이하로 떨어진 이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은 그나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전국 1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52명을 기록하였지만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위기감은 크다. 이 통계가 OECD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74명 보다 낮으며 인구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에 여전히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전남도는 2014년도에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를 경험했으며,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1%)에 진입하는 유일한 도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산업,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여 세대간 갈등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5개 군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분만 의료취약지 6개 군지역에 산부인과 지정원사업,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단계적 설치, 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오지지역 산모 응급시 교통편의를 위해 소방서 119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원하는 U-안심콜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직장문화가 정착 되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남 인구 감소속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월간 인구 감소폭이 둔화하다가 5월에 171명, 6월에 255명씩 두 달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다. 10년 전에 허물어진 '인구 200만명' 회복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증가, 귀농·귀촌 증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 요인으로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장,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 사회공동체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위에 함께하는 '가임 당사자'를 배려하는 문화조성이 시급하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가꾸어 가는데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社說

## 연대·나눔·배려, 이것이 '광주정신'이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막 이틀 전인 지난 1일 밤,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만취한 한 남성이 5만 원권 지폐 통치를 길바닥에 쏟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혹시나 돈이 분실될까 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지켰다. 결국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버린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이런 사연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은 무정부상태에서도 강도나 도난 사고가 1건도 없었던 5·18 당시를 떠올렸고, '광주정신'의 재현이라며 반가워했다.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U대회에서도 이런 연대와 배려 및 나눔의 광주정신이 빛나고 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와 나눔 특유의 '정'(情)이 어우러지면서 선수단과 임원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 참가국 144개국 가운데 45개국은 국제대회에 선수 파견조차 힘들 정도로 빈국이다. 광주 시민들은 이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았

다. 지진 참사로 항공료조차 부담스러웠던 네팔 선수단은 광주 시민들의 모금으로 대회 참가의 꿈을 이뤘다. 선수촌 식권 구입 비용을 아껴 모국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다는 타지키스탄 태어나 돈이 분실될까 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지켰다. 결국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버린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은 각국 선수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외국인 선수의 발걸이 찾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결코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이 오히려 담까지 열어 주는 등 남도의 정을 듬뿍 안김으로써 '원더풀 코리아'를 연발하고 있다.

이제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은 자국으로 돌아가 광주를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이 느끼고 감동받았던 '나눔'과 '연대' 그리고 '배려'라는 '광주정신'이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부정청탁 금품 대상 농축산물은 제외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데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이다.

현재 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5만 원 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5만 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그동안 과일·한우 등 명절 선물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한선이 정해지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정부 목표

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수요 위축 우려'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추석과 설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 매출이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이 90%를 넘는다. 허용 대상 선물 상한선이 5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면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한우농가의 경우 한 해 2000여 원 이상 대부분의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5만 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그동안 과일·한우 등 명절 선물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한선이 정해지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수요 위축 우려'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추석과 설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 매출이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이 90%를 넘는다. 허용 대상 선물 상한선이 5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면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한우농가의 경우 한 해 2000여 원 이상 대부분의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5만 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無 等 鼓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법사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정장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발언을 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심했다"고 폭로한 윤 지정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나왔다. "증인은 조직(검찰)을 사랑하느냐?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며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 하자 이처럼 답한 것이다. 윤 지정장은

진정한 결정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받자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구에 회자되는 격언과 금언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 몇 마디 말이 삶, 특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검찰 지정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공직자로서 판단과 행위

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 안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법한 지휘나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법정이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삼급자에게 미룬 '하수인'들을 단호히 처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법정은 "진정한 결정이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할 때 도덕적인 선택을 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윗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써 가며 불신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의원의 총의를 받들어서'라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청와대가 당에 유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위법한지, 정당한지는 각각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권고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정이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이었기를 바란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디지털인쇄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